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과학기술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회, 과학기술이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 명(吳明) 신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세 가지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임기간 중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 장관에게 산업자원부·정보통신·건설교통·보건복지부 등 국가 과학기술분야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부총리급의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해 발탁했다고 국무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가진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노 대통령은 다과를 들며 김시중 과총회장에게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고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고, 김 회장은 곧바로 회의장내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장관이 이끄는 과학기술부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

❶ 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많았다

국가차원의 전체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과 기획, 조정·사후평가를 할 만한 조직이 없어서 그렇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고속철도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첨단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이외에는 과기부를 비롯한 여타 부처들은 여기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앞으로 이런 역할을 과기부가 하게 될 것이다. 또 주도권 다툼도 없어질 것이다.

❷ 현재 과학기술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닌가

과학기술처로 있었으면 다른 부처에서 하는 일을 통합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로 승격되면서 역할에 제약이 생긴 것이다.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기술처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과 과학기술부에 그런 기능을 새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심분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직제든 기능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국가적인 대형국책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의견이나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체도 범부처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고, 과학기술부는 다른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초과학관련 분야의 육성이라든지 기술분야에서 시간과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맡도록 할 것이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은 이제 민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원자력의 경우, 전력 생산이나 산업화는 민간이 주도하겠지만 안전문제에 따른 규제와 연구개발 분야는 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부의 고유업무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다.

❸ 우리 나라 과학 발전의 장애요인은 무엇으로 보고 있나

정부 산하 기관들은 소관 부처가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기 때문이다. 과

학기술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구소들도 아마도 과학기술부가 없으면 가장 잘 발전할 것이라는 대답이 나올지 모른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산하기관은 자율적인 경영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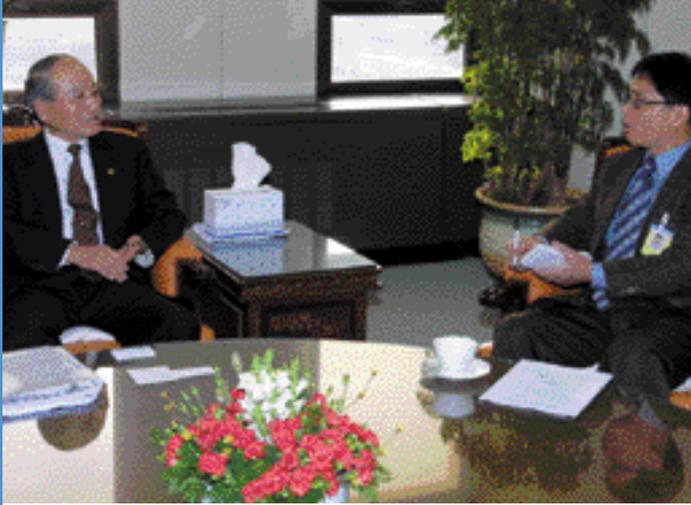
과학기술부 내에서도 실·국장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야 장관만 바뀌면 정부방침이 없어지거나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을 자기가 입안한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장관의 아이디어도 실·국장들이 입안해 실행하도록 하겠다. 사실 여러 부처의 장관을 해봤지만 그 때 전임자가 쓰던 책상 위치조차 바뀌본 적이 없다. 일부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부임하자마자 책상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뜯어고치고, 위치도 바꾸는 것을 종종 보았다. 나는 전임자가 잘한 것은 그대로 승계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가도록 하겠다.

❹ 이제 과학문화 확산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로 본다

과학문화 확산은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 정보문화 확산을 20여년 해오면서 그 중요성을 절감했다. 오늘 날 우리 나라 정보통신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올라선 것도 정보문화 확산이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이 경험을 살려 과학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이다. 1993년 대전 엑스포는 국민 과학문화 운동이었다.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100V와 200V의 차이가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을 너무 어렵게 가르쳐 온 결과이다. 모든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과학교육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공학 중에서도 전자공학은 대단히 어려운 학문이다. 내가 가르친 학생들은 전자공학이 재미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과학이 기본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쉽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문화창달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관련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의 대형 국책사업 현장의 경우, 제일 먼저 자리잡는 것이 홍보담당자들이다. 조감도를 내걸고 주민설득과 국민을 이해

Interview



시키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홍보비용에 투자되며 사업의 난해성에 따라 홍보인원도 비례한다.

대전 과학기술 엑스포 때도 홍보에 주력했었다. 만화를 삽입한 홍보영화는 세계 60개국에 배포됐었다. 소설이나 만화를 이용한 과학기술 홍보는 중요하다. 과학기술 관련 이벤트와 테마파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 장관직만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과학기술부 장관은 내 전공인 전자공학에 비취 딱 맞는 것 같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우리 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싶다.

▶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가 심각하다. 자녀들의 전공은 무엇인가

아들(34)이 있는데 경영과 기술을 같이 알아야 하는 전공을 택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학에서 시작된 것으로 새로 떠오르는 학문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오도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어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아들은 1년만 더하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미뤄놓고 학업 중간에 귀국해 병역의무를 마쳤다. 미국 시민권도 포기했다. 현재 국내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자녀들은 대우를 잘 받고 있다고 보는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교수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다. 인문사회계보다 어렵고 힘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도 그렇다. 어렵게 공부했

지만 사회에서 그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이공계를 선택하겠는가.

이제는 기업들도 이공계 출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과거 기업의 CEO들은 은행 자금을 많이 끌어오고 관청에 로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경영할 줄 아는 엔지니어 출신 CEO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기업의 생존이 제품이나 기술의 경쟁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도 연봉 수억원이 되는 엔지니어 출신 CEO를 많이 소개할 때가 되었다.

▶ 과학기술자가 국가 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중국의 정치 지도자 상위 5명이 전부 이공계 출신이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대만은 잘 나가는데 우리 나라는 왜 그러냐고 고 김재익 수석한테 물은 적이 있었다. 김 수석은 대만은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지도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을 기억한다. 우리 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국가의 발전에 가속도가 붙는다.

▶ 과학기술자가 경제 중심이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우리 나라는 세일즈맨은 인문계 출신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심어져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세일즈맨이라고 해도 대부분 공대 출신이다. 그래야 심층적인 상품 정보를 이해하고,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공대에서 경영학을 거의 가르치고 있다. 우리 나라 공대에서도 경영학 등 최고경영자 자질을 갖출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예일대 음대 학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 학장도 음대생에게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는가.

▶ 과학기술부도 비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사무관 5명을 뽑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소신껏 자신의 아이디어로 과학기술부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 사무관급을 뽑은 것이다. 국장이나 실장들만 해도 벌써 자신의 자리를 걱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내놓기 어렵다. 이번 팀에 뽑힌 사무관은 엄재식(38·기획예산담당관실), 이용필(32·연구개발기획과), 김원기(41·원자력정책과), 김성규(32·지방

과학진흥과), 장인숙(28· 우주항공기술과) 등 5명의 젊은 사무관이다. 이들이 과학기술부가 가야 할 방향을 새로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과학의 미래이기도 하다. 이들이 구상해 온 아이디어를 십분 수용할 생각이다.

▶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걱정되지 않는가

체신부 장관 시절이었다. 그 때 전자교환기(TDX)의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젊은 사무관들을 모아 놓고 의견을 구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의 말을 들은 결과가 오늘날 우리 나라가 정보통신의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것이다. 그 당시 고위 공무원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우리 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으므로 실패할 것이라며 말렸었다. 1980년대 당시 전자교환기의 개발비는 23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였다. 그 당시 1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없었던 시절이니 그 액수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것이다.

▶ 외국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는가

대만의 한 은행 이야기를 하겠다. 대만의 모든 은행들이 IBM 패키지로 전산업무를 보고 있을 때였다. 젊은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아 전산업무의 개선 방향을 만들게 했다. 그들은 탈IBM을 하면서 전산업무를 혁신시켰다. 스웨덴의 경우도 참고해 볼 만하다. 스웨덴의 국가체제는 잘 짜여 있기로 정평이 나있는 나라이다. 오래 전에 스웨덴의 국방부는 위관급 장교들로 팀을 만들어 30년 뒤의 스웨덴 국방 방향을 짜도록 했다. 30년 뒤라고 하니 영관급이나 장성들도 자신들의 자리와는 무관하다 싶어 반대를 하지 않고 방향을 잡도록 했다. 위관급 장성들은 스웨덴이 외국을 침공할 일이 없으니 방어개념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쪽으로 청사진을 짰다. 즉, 해안을 따라 미사일 기지를 마련해 해상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했다. 당연히 항공모함도 필요없고, 전투기도 갖추지 않았다. 이 결과는 국방비를 혁신적으로 줄이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30년 뒤라고는 하지만 한번 방향이 잡히고 나니까 그 체제가 바뀌는 데는 불과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 명 장관은 누구인가 >>>>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오늘 날 한국의 정보통신의 밑그림을 그리고, 기반을 다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80년대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못했던 국산 전자교환기(TDX)를 개발하고, 정보 문화 확산을 주도했다. 전자교환기는 외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전화교환기를 국산으로 대체하면서 한국의 전자산업의 진흥 효과도 같이 얻었다. 이후 우리 나라의 최대 과학축제였던 1993년 대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오 장관은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았었다. 오 장관은 영종도 신공항과 경부고속철도를 추진하기도 했다. 우리 나라의 발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만한 거대 국가 프로젝트 현장에는 오 장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자교환기는 한국의 정보통신 발전의 기폭제가 됐으며, 영종도 신공항은 동북아 물류와 항공허브 역할을 할 거대 역사였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경부고속철도 역시 많은 문제를 노정했지만 한반도의 물류 흐름의 축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 장관의 화려한 경력은 현직 각료 중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 만큼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 육군사관학교 교수, 대통령 경제비서관, 체신부 장관, 교육정책자문위원, 동아일보 사장, 아주대 총장 등이 주요 경력이다. 학계와 정계, 개발 현장 등을 두루 섭렵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경력은 과학기술의 진흥에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뛰어난 행정가이자 성공한 테크노크라트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대담 _ 박방주 중앙일보기자 bpark@joongang.co.kr